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을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3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2. 26.

발 의 자 : 정을호 · 이해식 · 이훈기
강유정 · 강득구 · 김영배
이연희 · 강훈식 · 박해철
임호선 · 박수현 · 문진석
송재봉 · 김문수 · 전진숙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영유아 수의 감소 등으로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지고 있음.

그런데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. 이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아 오히려 영유아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.

이에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 수의 급감 등으로 인하여 해산할 경우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의3 신설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본문 중 “평가”를 “평가·해산”으로 한다.

제4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3조의3(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특례) 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요청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와 운영상황 등을 포함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가 첨부된 해산인가신청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

산할 경우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반환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반환재산 외의 잔여재산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
1. 제2항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
2.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연
3.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재원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하여 편입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

⑥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, 제5항에 따른 편입·퇴직위로금 지급 등에 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자

7의2.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

7의3. 제43조의3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잔여재산 처분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4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해산인가를 신청하는 사회복지법인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례) 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확보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설치·운영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(이하 “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”이라 한다)은 영유아 수가 급감하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시·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요청한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회계감사와 운영상황 등을 포함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첨부된 해산인가 신청서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해산과 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목적사업을

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반환한다.

⑤ 제4항에 따른 반환재산 외의 잔여재산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7조에도 불구하고,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.

1. 제2항의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
2.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출연
3.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과 임직원 보호를 위하여 재원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하여 편입 및 퇴직위로금 등으로 지급

⑥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심사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리, 제5항에 따른 편입·퇴직위로금 지급 등에

제54조(벌칙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설>

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7. (생략)

<신설>

관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 등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.

제54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제4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목적사업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각종 기본재산 등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자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.

1. ~ 7. (현행과 같음)

7의2.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

<p><u><신 설></u></p> <p>8. (생 략)</p>	<p><u>해산인가신청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제출한 자</u></p> <p><u>7의3. 제43조의3제5항 각 호에 서 정한 잔여재산 처리방법을 위반한 자</u>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